

윤석열의 위기는 우익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3면

신지에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3면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4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12면

코로나19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2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7면

국제
수단 혁명, 꼭두각시
총리를 끌어내리다 8면

찰레 좌파 대통령 당선인,
벌써 배신 조짐 5면

서평/영화평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폴 더미토, 책갈피) 11면

《미중 카르텔》(박홍서, 후마니타스) 6~7면

《돈 룩 업》(넷플릭스에서 뜨는 영화) 10면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장호중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당과 대형마트 같은 필수 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고, 커다란 소리로 접종 여부를 알리는 인증 방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별 대책도 없이 의무만 강화하는 정부 지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등은 물론 학원과 도서관 출입도 제한하기로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정부의 조치대로라면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과 또래 사이의 따돌림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선택권도 없이 불이익만 주는 셈이다. 이런 부담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도 전가된다.

설득

물론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줄여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백신이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퇴출되거나 폐기됐을 만큼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사람들이 이 악물고 맞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진지하게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백신接种의 이익을 설명하고 부작용을 폭넓게 책임지며 접종을 설득해야지,



책임 전가 백신패스 의무화는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백신패스 의무화는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효과를 낸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실패로 지난해 말 확진자 수가 치솟고 병상 부족이 심각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62퍼센트로 치솟아 당시 세계 평균(1.21퍼센트)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치료할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2년 동안 환자를 치료할 병원은 거의 늘리지 않았고 인력 총원도 말뿐이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거의 개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정원만 늘리거나 그조차 차일피일 미뤘 왔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도 정작 치료받을 수 있는 병

상이 없어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소위 '전문가'들은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장 논리에 사로잡힌 데다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재택치료' 같은 엉터리 처방들을 변호하고 있다.

병상과 인력 확충

백신패스 의무화는 병상과 인력 확충이라는 진정한 대책을 가리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방역패스 검사 거부자 처벌 규정 마련'을 자영업자 고통 경감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무엇보다 지금 사용되는 백신은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완료해도 감염 자체를 막아 주지 못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만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감염이 크게 확산된 이유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며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كرون 변이까지 등장하며 백신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수록 백신에만 의존하려 한다.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등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인 조치들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점차 방역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이윤을 앞세워 방역을 약화하는 한편, 그 책임과 고통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방역 자체에 대한 저항도 커질 것이다. 유럽 일부 나라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조치가 낳을 효과를 얼핏 보여 준다. 국내에서도 이준석, 원희룡 등 우파가 이런 불만을 이용하려고 백신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집회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서 보듯 이들의 '권리' 운운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모른 체한다. 서울 명동 한 복판에 있는 세종호텔의 사례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데도 말이다.

팬데믹 초기 정부와 언론이 잠깐 보였던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알파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보여 준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과 청소 노동자들, 학교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조처들 덕분에 이익을 본 것은 기업주들뿐이다. 예컨대 SK 등은 당장의 큰 이윤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소비 지원 대책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고작 며칠의 생계비에 지나지 않은 반면 기업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윤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지원이 주로 기업 지원에 쏟렸다는 사실은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조차 지적하는 바다.

그러나 백신 불평등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는 것에서 보듯 이윤 시스템은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한층의 불평등만 양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팬데믹 고통을 전가하는 데 맞서 삶을 지키는 것은 물론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김승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공수처는 이성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의 통신 내역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회했다. 국가기관 내 인물(심지어 공수처 내부)일

가능성이 큰 제보자를 추적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취재원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나 정치적 중립은커녕 집권세력의 정적 견제 수단이자 국가기구 통제·단속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0년에 본지는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공수처는 진보 개혁과는 상관없고 민주당이 만드는 검찰2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에게는 지지할 이유가 없는 또 하나의 억압기관일 뿐이다.”(관련 기사: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 없다’, 330호)

위선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 주듯이, 공수처는 기존 검찰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권력을 오남용하는 억압 기구로서의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함으로써 권력 기관의 본질적인 억압성을 개혁할 수 있을 것처럼 굶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었고, 진정한 목적이 다른 데(문재인 정부 요인들의 부패 의혹 수사 방해하기)에 있는 위선이었다.

가령 통신 조회를 수행한 공수처 수사과의 상당수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로 이들은 경찰에서 정보 수집(사찰) 임무를 맡고 있던 자들이다.

한 해에 500만 건 넘는 통신 조회가 이뤄질 만큼, 통신 사찰은 검찰·경찰·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대한 사찰 정보 수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26년간 검찰에 몸담았으며 총장까지 올랐던 윤석열이 “공수처가 계수타포나 할 일을 하”는 “미친 사람들”이라며 핏대를 세우는 것은 뻔뻔한 위선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의지했고 그 부서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부서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버금가게) 악명 높은 검찰의 사찰 부서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의 후신이다.(관련 기사: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346호)

검찰, 경찰, 정보기관 등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 기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결코 민주화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실행하는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정치 조직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99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위선과 공수처에 대한 환상은 이제 그 불품없는 실체를 다 드러냈다. 진실은 민주주의 확대를 자본주의 국가에 의탁해서는 얻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모든 민주적 권리는 피억압 대중이 더 나은 삶과 해방된 사회를 위해 스스로 투쟁할 때 비로소 실질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정진희 사진: 노동자 연대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김승주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한다.

외연 넓히기의 일환으로 영입된 페미니스트 신지예도 국민의힘 내부 반발 때문에 2주 만에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연말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의 발언과 행보는 윤석열의 우익성을 더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은 12월 29일 안동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국 우파의 전통적 결집 코드인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좌의 혁명 이념, 북한 주사 이론을 배워 가지고 민주화 운동 대열에 끼어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하던]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 북한은 미사일 평평 쏘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한다.”

공수처의 통신 사찰에 대해 권위주의적 구태라며,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급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사찰을 일삼았어도]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뭘 했냐”며 은근히 독재 정권을 비호했다.

윤석열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는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정

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핵발전과 원전 수출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박근혜

12월 31일에는 자신이 구속에 일조했던 박근혜가 석방돼 나오자 환영한다고 밝히며 과거를 변명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법 집행하던 공직자 신분의 내가 아니다. 국민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 신분’이라는 것이다. 법치 운운하던 때는 언제고 말이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은 지배계급이 윤석열에게 바라는 바를 반영한다.

지배계급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더 단호한 친기업 정책, 노동자 조건 공격, 민주적 권리 제약,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 등을 원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를 반동적 방향으로 모아 5년 전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타격을 입은 우파 세력에 재기 기회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고자 한다.

그러한 지배계급 이익 앞에서 윤석열이 입으로 떠드는 자유, 민주주의, 공정, 법치 등은 쉽게 무시될 헛소리다.

사실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의 칼날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턱없이 무뎠다. 군부의 계엄 검토 의혹, 국정원과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세월호 참사 문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등.

현재 윤석열을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이 결집해 있고, 윤석열 자신도 그에 적극 부응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인 윤소영 교수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법치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자인 윤석열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인민주의자 이재명보다 낫다”고 주장한 것은 허상을 좇는 것으로, 윤석열의 위선과 세력 기반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지지하는 윤석열이 부상했을 때 계급간 세력 관계에 미칠 효과를 가늠하여 여겨서는 안 된다.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정진희

신지예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가 2주 만에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되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서 신지예를 밀어냈고, 윤석열도 이를 수용했다.

신지예는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도 새시대위에는 남아 윤석열 당선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 신지예가 새시대위에서도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지예 영입을 주도한 김한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사퇴했다.

신지예 영입이 윤석열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지예 영입 전부터 청년층에서 윤석열 지지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윤석열은 대구경북 당원 연설 등에서 강경 우파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것이 중도층 성향 청년들의 대거 이탈을 낳았다. (안철수가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이 이 점을 방증한다.)

신지예가 페미니즘의 연사로 윤석열을 미화하며 그의 강경 우파 본색을 가려주려 애썼지만, 지지율 하락에 다급해진 윤석열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어 신지예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페미니즘 사상의 모순

신지예는 자신의 합류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이준석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수정에게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긴 것을 보며 자신도 윤석열 캠프에 안착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듯하다.

이수정은 신지예의 합류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는 했지만, 신지예의 행보에는 이수정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신지예가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이수정은 신지예를 후원회로 지원했다.

신지예는 이수정이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갔을 당시 국민의힘이 페미니스트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수정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았다. 당시 신지예가 대표였던 한국여성정치네트워クの 12월 20일자 성명서는 “교수님의 행보에 애정 어린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동시에,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의 영입 제안에 망설였던 신지예는 “새시대준비위가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며(12월 29일 <뉴스1> 인터뷰) 합류했다. 새시대준비위는 윤석열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민주당 대표 출신 김한길을 끌어들이어 위원장직을 맡겨 직속으로 운영했다.

신지예의 새시대준비위원회 합류와 사퇴는 페미니즘의 모순을 보여 준다. 신지예가 페미니즘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그의 행보에 비판적이다),

그의 행보가 순전한 개인적 일탈은 아니다.

신지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 속에서 윤석열을 도와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겼다.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에 대해 (다소간에) 비판적이면서도 계급 차이가 아니라 젠더 차이를 중시하는데, 페미니스트의 공직 진출을 통해 그런 차이를 넘어선다는 주류화 전략을 윤석열에게 도박을 걸어 실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순된 선택은 윤석열의 우파적 기반과 충돌해 급세 좌절됐다. 윤석열은 새 세대 페미니스트로서 상징성이 큰 신지예를 영입해 외연 확대를 노렸지만, 당의 핵심 기반과 모순을 빚은 이 카드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쉽게 내버렸다.

신지예 사건은 페미니즘의 전략적 성찰이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라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당이고 자본가 계급에 핵심 기반을 두고 있지만, 중간계급과 일부 노동조합 관료들에게도 기반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통해 공직으로 진출해 왔다.

그러나 집권당과 국가기구에 진출한 페미니스트들은 타협을 거듭하며 지지자들의 실망을 사 왔다.

신지예의 사퇴에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게 왜 그랬어?” 등 여러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은 신지예의 영입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해 왔다. 다행히 정의당은 합류 즉시 신지예를 비판했다.

여연과 민주노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신지예의 윤석열 캠프를 ‘이해해 주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특히 여성단체연합의 경우에는 곤혹스러움이 클 것이다. 민주당에 여연 출신의 페미니스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왔기 때문에, 신지예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배신했다고 비난한 것을 정면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페미니즘이 좌우를 넘어선다는 신지예의 주장도 여연이 공유해 온 논리였다.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면 페미니즘에 불리하다는 진영 논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신지예의 합류에 침묵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김수경 여성국장이 신지예의 행보를 ‘이해해 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지만, 조직의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우파 반대가 확고한 진보당의 경우는 약간 미묘하다. 진보당은 단지 신지예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논란이 컸던 페미니즘 관련 쟁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낙태죄 폐지처럼 대중의 지지 여론이 분명할 때는 지지를 분명히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진보당이 신지예의 윤석열 지지 행보처럼 예민한 정치적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회피적이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을 지배적 생산관계에서 찾지 않고 젠더 관계에서 찾는 페미니즘 사상의 모순을 의식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또는 좌파가 달리 믿는다면, 스스로나 남을 속이게 된다는 것을 신지예 사건은 보여 준다.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김문성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도 지난 30년 동안 악화돼 왔다고 지적한다. 전체 자산의 4분의 1을 상위 1퍼센트가 소유한 반면(평균 61억 원), 하위 50퍼센트는 20분의 1을 나눠 가졌다(평균 2700만 원).

소득을 보면, 한국의 상위 1퍼센트가 1년에 6억 4000만 원을 벌 때, 하위 50퍼센트는 1200만 원을 번다. 인구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버는 셈이다.

소득 보장 공약

불평등 심화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소득 보장과 복지 확대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내놔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최근 상병수당 도입 등 “신복지”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신복지”는 당내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이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이재명은 이낙연의 신복지팀(김연명 교수 등)을 그대로 영입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를 만들었다.

신복지의 기본 열개는 최저 보장 소득 기준선을 정해 두고 여러 사회수당들을 증액해 소득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인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등 각종 사회수당의 액수를 일정한 최저 보장 기준선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돌봄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늘려 평범한 사람들의 지출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신복지의 이런 목표는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시민평생소득’ 공약과 통하는 면이 있다. 정의당의 공약은 시민최저소득 보장, 사회보험의 전 국민 소득보험화 그리고 연령별·역할별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이뤄진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국가책임 일자리제, 주4일제, 전국민고용보험, 무상교육 등을 내놔다. 다만 농민 월 150만 원 지급 공약은 부분적 기본소득과 흡사하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월 65만 원(연 78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내놔다.

부자 감세 등을 지지하는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진지하게 따져 볼 만한 복지 공약 자체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사진 출처 이재명 캠프

구애 이재명이 중도층을 견인한다며 우클릭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기성 질서를 책임 있게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보이려는 것이다

이재명: 기본소득에서 신복지로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지율 위기를 겪으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좌우 줄타기를 해 왔다. 노동계급 출신이자 민주당 주류와는 다소 다른 기반(노동조합 내 상층과 좌파적 지식인 기반)을 갖춘 이재명에 대해 한국 지배계급이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파는 보편적 복지 자체를 싫어한다. 국가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복지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 유인”(시장 규율)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다가 복지 확대는 부자 증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러 보편 복지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특별히 흠집내는 데는 이재명을 떨어뜨리려는 속셈도 클 것이다.

이재명이 중도층을 의식한다며 우클릭 연사를 늘리는 것은 기성 사회 질서를 더 책임 있게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보이려는 시도다.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전두환의 경제 성공 인정 발언,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등.

물론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노동계급 내 변화 염원층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우파 눈치 보기는 기회주의적인 좌우 줄타기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의 선거 지지율 면에서는 득이 되는 듯하다. 윤석열은 강경 우파적인 성향이 계속 드러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파의 의제와 강조점을 중도파·개혁파들이 수용하는 것은 길게 보면 우파에게 유리한 요소가 된다.

계급타협적

그렇다면, 이재명이 기본소득보다 신복지를 강조하는 것도 우경화의 일종일까? 이미 그의 **기본소득 공약 자체**가 **후퇴해** 왔다는 점에서는 우경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복지론이 더 분명하게 복지 자원 마련 방안으로서 부자 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이 지난 수년간 주창해 온 기본소득론에는 급진적 면모가 있었다. 모든 개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조건 없이 지급, 공유부채당론(“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근거로 탄소세·토지세 등을 재원으로 제시한 것 등, 토지세는 부자 증세다.

그럼에도 이런 비교가 무색한 것은 이재명 공약의 액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재명의 후퇴(연 100만 원)를 비판하며 월 65만 원(연 780만 원)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신복지 정책은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과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신복지론은 기존의 복지 재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늘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를 부담스러워해서다. 노동계급 증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인세나 부자 증세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주류의 신복지 노선은 이른바 중(中)부담-중(中)복지다. 획기적 복지 확대를 위한 대규모 부자 증세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증세를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세금을 올리는 점진적 보편 증세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이 신복지를 더 강조하는 것은 부자 증세 문제에서 체제와의 타협을 보여 준다.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공약이 형식상 신복지 구상과 유사한 것은 정의당이 보편 증세를 선호해 온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정의당은 현재 이 공약의 재원을 명확하게 내놓진 않았다.

사회의 변화

복지 문제에서 일차적인 핵심은 **자본주의 국가의 예산(지출) 우선순위(어느 계급의 필요에 부응할 것인가)** 문제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세금으로 걷어서 마련하는 것이므로 **재원 마련(징세)의 방법(어느 계급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는 결국 **전략과 주체(누가 어떻게 이를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3가지 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지는 국가 관료와 기업주들이 재난 지원금과 기업 지원 각각에 대해 보인 상반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났다.

결국 보편적 복지 확대가 강력한 재분배를 통한 평등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려면, 군비 대신 복지 지출 늘리기와 부자 증세가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속적인 계급투쟁

과 동떨어질 수 없다.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정의당·진보당 등 좌파들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대체로 이런 목표와 수단에서 많이들 멀어졌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를 사회민주주의 복지사회로 재편한다는 목표 아래서 ‘부유세와 무상으로·무상교육’을 한류음으로 주장했지만, 지금은 체제 실패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를 넘어서지 않는다.

최근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변화되는 경제 환경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 늘고 있는데, 고용 노동자 중심 사회보험 방식이 주종을 이뤄서 복지 사각지대와 노동계급 내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이들의 방향은 국가가 이를 보조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보편 증세 등)하는 것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직된 고용 노동자가 받는 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노동자들이 그런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다. 그것은 국가와 자본가들이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의 결과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돌봄(보육) 등을 대거 무상화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현업에서 물러난 노동자·서민에게 충분한 생활수당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 기업과 부자들이 재원을 내야 한다. 사각지대 해결은 ‘모델’이 아니라 결국 계급투쟁 문제다. 제도는 투쟁이라는 매개를 거친 결과물이다.

칠레 좌파 대통령 당선인, 벌써 배신 조짐

김준호

칠레의 좌파 대통령 당선자 가브리엘 보리치가 취임 전부터 위험한 타협을 하고 있다.

칠레 일간지 <엘 메르쿠리>는 내각 인선 중인 보리치가 핵심 장관직을 두고 중도 좌파인 사회당, 중도 파인 민주당·자유당과 교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들은 독재자 피노체트가 물러난 뒤 번갈아 집권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보리치가 학생 시절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된 교육 민영화 반대 투쟁도 사회당 미첼 바첼레트 정부 하에서 벌어졌다.

당시 민영화를 계획하고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들이 새 정부의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리치는 “좌우를 포용”하는 노선과 사회당 전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의 지지 선언 덕분에 결선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었다고 여긴다. 보리치의 인선 논의는 이에 따른 논공행상인 것이다.

그러나 보리치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선거 때 투표하지 않았던 120만 명(전체 결선 투표자의 6분의 1)이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를 저지하려고 보리치를 찍은 덕분이었다. 카스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결선 투표에서도 카스트에 투표했다.

더 중요한 동기는 보리치가 줄곧 견지한 정치적 방향이다. 보리치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

보리치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확실한 진전은 광범한 합의로만 가능하다. 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점진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조국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매일 애쓰는 노동자들, 재계와도 손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리치는 운동에 자제를 요구한다. “모든 것이 한달음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 변화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 “책임감”은 신자유주의 우파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나는 선거 운동 내내 공약한 바를 재확인한다.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책임을 다하고 거시 경제를 수호할 것이다 … 내게는 조국의 앞날을 위해 야당과 힘을 합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칠레의 부르주아지는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 없다.

칠레 경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기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 까지도 6.1퍼센트(2011년)에 이르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국제 원자재 호황

이 가라앉으면서 성장률은 1퍼센트 대로 추락했다.

전임 피네라 우파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노동계급을 맹렬히 공격했다. 팬데믹이 찾아오자 기업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14퍼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을 퍼주고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했다. 그럼에도 2020년에 칠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8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제 경제 저성장, 물가 앙등, 국제적 금리 인상을 앞둔 칠레 지배자들은 보리치가 대규모 긴축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2019년 항쟁 당시 500억 달러 이상(칠레 중앙은행 추산)이 국외로 유출됐던 것과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위험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대중의 운동은 단속하면서 자본가·우파들과 “거국적 협력”을 도모하는 보리치의 전략은, 2019년 항쟁에서 드러난 변화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집권, 운동, 좌파

보리치는 대중의 극우 반대, 진보적 변화 염원 덕에 당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리치가 대중의 행동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그 염원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2019년 10월 칠레 대중은 피네라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 시도를 계기로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는, 계엄과 시위대 수백 명의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거리 항쟁과 총파업으로 변졌다.

위기에 빠진 피네라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했지만, 운동의 요구는 이미 민주적 권리 확충, 복지 개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성차별 반대, 원주민 권리 보장 등으로 광범하게 확대됐다.

칠레 대중은 대대적인 사회 변화를 바랐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양보 조치를 불충분하다고 여긴 응답자가 80퍼센트나 됐다.

하지만 퇴진 위기에 몰린 피네라 정부가 작은 변화를 약속했을 때, 운동은 기로에 섰다. 전진을 위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염불보다 잣밥

기성 좌파 정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긴축과 민영화에 협조하거나 직접 추진하기도 하면서 대중을 배신한 전력 때문에 운동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 당들의 관심사는 운동의 성장이 아니라, 운동으로 드러난 반정부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사회당·공산당 왼쪽의 급진 좌파들은 염불보다 잣밥에만 관심 있던 두 당에 비판적이었지만 이들과 다른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진 출처: Gabriel Boric(메이스트라)

극우 반대 보리치는 1차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100만여 명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결선투표에 참가한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

급진 좌파들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대중운동이 타락한 기성 좌파들의 전략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며 운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했다. 그래서 운동을 더 전진시킬 전략을 제시하거나 그럼으로써 성장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긴 공백 덕분에 보리치가 부상할 수 있었다. 보리치는 별다른 세력도, 대표성도 없었지만, 보리치를 고리 삼은 운동을 단속하려는 사회당·공산당의 도움으로 대(對)정부 “평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운동의 성장에는 별다른 구실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과실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런 세력들 덕에, 위기에 처했던 피네라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거대한 항쟁이 분출했지만 투쟁을 전진시킬 급진적 정치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성 권력자들과 타협을 도모하는 온건 개혁주의 전략이 득세하는 것은 칠레만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이집트, 2010년대 그리스, 2019년 수단에서도 그런 일은 거듭됐다.

단속

보리치의 정치적 불모선은 스페인의 포데모스였다. 스페인에서도 사회당은 긴축을 추진한 전력 탓에 운동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포데모스는 이런 사회당과 2019년부터 연정을 추진했다.

포데모스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보리치도 운동을 더 전진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속해, 그런 운동이 제3 정당의 선거적 성취로 수렴돼야 한다고 봤다.

보리치는 포데모스를 본뜬 ‘광범전

선’ 결성을 호소했다. 공산당을 비롯해, 이제껏 운동의 외곽에 있던 소수 좌파·페미니스트들이 모여들었다.

보리치의 ‘광범전선’과 공산당은 새 헌법 제정 요구를 이용해 운동을 기존 체제의 틀 안으로 단속했다. 운동의 자생성만 일면적으로 찬양하던 칠레의 급진 좌파들도 새 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용해됐다.

이후 칠레 정국은 헌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지 말지부터 재문하는 지리한 과정에 휘말려 들어갔다. 새 헌법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과정 끝에 대통령에 당선한 보리치는 이제 운동을 더 단속하고 타협을 밀어붙이려 한다. 자신이 칠레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임을 자본가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계급을 공격하라고 요구하는 체제에서, 그런 타협으로는 약속한 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런 방향을 추구했을 때의 결과를 시사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리치가 모델로 삼은 포데모스가 바로 그런 사례다. 포데모스는 한때 자신이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사회당이 이끄는 연립정부에 참가했다.

그 정부는 팬데믹·경제 위기에서 대중의 안전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다 위기에 빠졌다. 포데모스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 ‘복스’보다 더 많이 득표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몸소 후보로 출마한 당 대표 이글레시아스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칠레 역사에는 훨씬 더 비극적인 사례가 있다.

1970년 집권한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를 자처하며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아옌데도 급진적 운동을 단속하면서 지배자들과의 타협을 통해 변화를 이룬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 대가는 칠레 대중의 피로 치러야 했다. 아옌데 정부는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몰락했고, 이후 유혈낭자한 학살과 독재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칠레에는, 피노체트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극우가 피노체트 퇴임 이래 가장 크게 성장해 있다.

운동과 전략

그럼에도 카스트의 패배와 보리치의 집권은 노동자 대중에 자신감을 줬다. 이는 운동이 전진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하지만 그런 전진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칠레 자본주의가 처한 중첩된 위기 속에서 자본가·우파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공격을 버르고 있다. 보리치식 “조국을 위한 화합과 단결”(사실은 기성 권력자들과의 타협) 전략은 대단찮은 개혁조차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칠레 노동계급, 혹은 적어도 그들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는 지난 상황 전개에서 올바른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진정한 변화로 가는 길이 의회 내 타협과 “거국” 정부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전투적인 대중운동을 재건하는 데에 다시 매진해야 한다.



서평 | 《미중 카르텔》(박홍서 | 휴마니타스 | 364쪽 | 18,000원)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김영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 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불안감을 느껴서 이를 견제하다가 전쟁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몇몇 우파 이데올로그들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진영이 갈리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갈라서는 건 너무 큰 손해를 초래하며, 신냉전 도래를 피해 균형 외교를 추구하자는 반박도 있다.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가 쓴 《미중 카르텔》(휴마니타스, 2020)은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책이다. 박홍서는 이 책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확증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미중 카르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핵무기나 지리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 등을 고려하면 미중 간 전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현실적이다.” 미·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에 주목하는 박홍서의 주장은 일부 좌파들도 참고하는 듯하다.

박홍서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중국에 달러와 지식을 수출하고 중국은 미국에 제조업 상품을 수출해 왔다는 것이다.

그도 미·중 간에 갈등과 경쟁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주장한다. “현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서 둘 다 큰 이익을 얻고 있고 “군사 충돌은 곧 공멸”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현존] 국제 질서 안에서의 다툼”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홍서는 지금과 같은 핵무기 시대에는 레닌의 제국주의론보다는 “자본주의 국가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한 카우츠키의 말이 더 적확할 것이라고도 했다.

초제국주의론

박홍서가 언급한 카우츠키의 주장은 일명 초제국주의론으로 불린다. (관련 기사: 본지 384호, ‘카우츠키’ 초제국주

의론’에 대한 레닌의 비판).

100여 년 전에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동역학에서 비롯한, 자본주의의 불박이 같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군수 자본가 같은 일부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이해했다. 그는 전쟁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봤다.

박홍서의 접근도 본질적으로 이와 유사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군산복합체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며, 중국에서는 반미 민족주의가 “중국공산당의 대중 동원”을 원활하게 해 주는 기제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미·중 전쟁은 없을 공산이 크다고 여긴다.

카우츠키나 박홍서의 주장처럼, 과연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상호 의존 등에 기초해 강대국 간 전쟁이 없는 국제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 간에 군사적 갈등이 일어난 사례는 매우 많았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군사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제어해 줘도, 근본적으로 막아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외려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갈등을 더 불안정하게 해 전쟁이 일어난 사례들이 많았다.

결정적으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데 박홍서는 오늘날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후기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본주의가 과거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듯하다.

즉, 미국은 “승산 없는 제조업 대신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융자본 확산에 치중”해 왔고, 이런 금융 지배와 더불어 “지식 기반 경제”로 경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와 같은] 신용경제에서는 생산 없이도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 체제에 편승해 제조업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그렇게 번 달러를 다시 달러화 자산에 재투자해 미국 소비 시장을 부양했다.

분명 자본주의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 근원적 특징은 변함없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노동 착취에 의존하는, 미친듯한 자본 간 축적 경쟁의 체제다. 이 때문에 모순적이고 항구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자체의 모순 패

문에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데다가 경기 회복은 짧고 더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불균등 발전도 일으켜 왔다.

또한 군수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자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상호 의존(통합)이 경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렸지만, 최근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까 봐 미국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바라고 지지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5G 등 첨단 산업의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어떻게든 고립시키려 한다.

불균등 발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경제는 달러와 상품 수출입 등에서 순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 점이 이 순환 구조가 안정적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 균형 성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는 이 순환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한 바탕 위에 있음을 보여 준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불황에서 세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 중국이 새로운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장기 불황은 국가들 간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협력적 대처가 어렵게

되고,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2008년 위기 이후로 미·중 갈등도 본격적으로 악화돼 왔다.

게다가 경제 위기와 더불어 국가 간의 상대적 경제력 비중도 변해 왔다. 경제의 지리적 분포 변화는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도 바꿔 놓는다. 이런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그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다.

박홍서는 중국이 지금의 국제 질서에서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었고, 그래서 “현상 유지 국가”에 가깝다고 본다. 기술 굴기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미국과 격차가 여전히 커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물론 지금 중국 경제가 달러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점이 중국 제국주의의 취약점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이 당장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부상과 그것이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주장보다는 더 복잡하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국제 질서에 완전히 통합된 세력은 아니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구축해 온 동맹 체계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경쟁의 격화

오늘날 중국 지배자들은 수십 년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미국을 밀



긴장 고조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보하고, 대만을 중국에 편입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목표들은 중국 지배계급한테는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다. 즉, 대외 무역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중국이 상품 수출입, 해외 투자, 자원 수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박항서도 중국의 “경제 이익”과 군사력을 연관된 문제로 여긴다.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 노력과 미국의 견제도 책에서 소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양측이 벌이는 무력 시위를 “과시”에 그칠 일로 치부한다.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 유지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바다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기존 국제 관계의 불안정을 불가피하게 수반했다. 중국의 존재가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공해 준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향이 없더라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흥은 미국의 패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래서 미국 지배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중국을 제압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현지 국가들에 접근해 왔다. 이는 현지 국가 지배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고, 중국의 맞대응도 불렀다. 이를 배경으로 지금 인도-태평양에서는 해묵은 분쟁들이 재발되거나 악화되고 있다. 인도-중국 국경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문제 등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때로 지배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들어 낸다. 오늘날의 장기 불황과 기후 위기처럼 말이다. 제국주의와 전쟁 문제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결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핵무기

국가들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무력의 우위로 판별된다. 그래서 국가들은 무기를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끔찍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는 결국 인류를 몇 번이고 망하게 할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져 왔다.

핵무기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강대국 간 전쟁이 제어될 수 있다는 환상도 만들어 줬다. 공멸할까 두려워서 국가 운영자들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게 된다는 것이다.

분명 핵무기의 존재는 강대국들이 한동안 서로 전면전을 벌이기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쟁의 논리는 인류가 핵전쟁에 참화에 빠질 뻔한 위기도 슬하게 만들어 냈다.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오판해 어처구니없게도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여러 차례였다.

강대국들의 자본가 계급도 핵무기가 자칫 자신들이 누려 온 모든 부를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핵무기의 배치와 사용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내재된 것이기에, 자본가 계급은 핵무기 제거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없다. 지금도 미국, 중국, 러시아 지배자들은 상대방을 겨냥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여념이 없다.

미국과 중국이 요행히 미래에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결코 보장된 미래가 아니다. 박항서는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 평화 공동체 수립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한국 국가도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의 불안정에 일조해 온 세력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기대를 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국 간 갈등과 전쟁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샘 오드

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이란 2월에 열릴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최초로 지난달 보이콧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대부분은 무슬림이다) 100만 명 이상을 신장 자치구 서부에 있는 억압적인 ‘정치 교육’ 수용소에 가둬 놓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습박하는 감시, 고문 방식 등은 이미 널리 보도된 바 있다.

중국은 처음에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인정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하나 둘씩 여기에 가세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선이다.

이 국가들은 저마다 고문을 벌이는 수용소나 학살, 군사 점령에 연루된 역사가 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적 힘 싸움에 지나지 않는 이 보이콧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구르인이 받는 억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위구르인 단체들이 스스로 보이콧을 촉구한다면 사회주의자는 이를 간단히 일축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의 둘 다에 반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스포츠가 정치나 국제적 갈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대의 올림픽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올림픽은 제국주의적 경쟁에 대한 대중적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됐다.

급진적 작가인 조지 오웰은 애국주의·민족주의가 언제나 주요 스포츠 행사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조직자들은 필시 “세계인들의 단합”을 운운할 테지만, 각국 지배계급들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인류의 우애가 아닌 애국주의와 경쟁심을 고취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올림픽은 여러 차례 보이콧에 직면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때문에 1976년에는 29개국이 캐나다 몬트리올을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뉴질랜드의 올림픽 참가를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한 해 전 뉴질랜드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 때문에 국제 스포츠 교류에서 배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친선 럭비 경기를 벌



여 반발을 샀다.

미국과 영국은 이 보이콧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1968년 멕시코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했을 때에도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았다.

지배계급은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득이 될 때에는 얼마든지 스포츠를 이용했다.

가장 참여가 활발했던 올림픽 보이콧은 1980년 소련이 개최한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었다. 이 올림픽에는 미국의 주도로 65개국이 불참했다. 그 이유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미국 지배계급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격정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벌어진 일을 봐야 한다.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하고 극도의 빈곤에 빠뜨려 놓은 채 미국이 떠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대기근의 위협에 처해 있다.

동기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의 진정한 동기는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자국의 세계적 패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본다.

이 보이콧은 위구르인들이 해방을 쟁취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서방이 중국과의 갈등을 더 첨예하게 끌고 갈 태세가 돼 있음을 과시하는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올림픽 보이콧이 진정한 변화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대중적 압력이 행사될 때 뿐이다.

1968년에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올림픽에서 배제됐다.

억압받는 위구르인들의 해방은 그들 스스로의 저항과 반란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해방은 미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6호 번역 이원웅

수단 혁명, 꼭두각시 총리를 끌어내리다

찰리 킴버

흑독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대중의 거리 항쟁에 밀려 수단 총리 압달라 함독이 사임했다.

함독은 1월 2일 사임을 발표했다. 사임 발표 직전 보안군은 주기적으로 열리던 집중 집회를 진압하면서 시위 참가자 세 명을 살해했다.

함독은 지난해 10월 군부 지도자 알부르한이 이끈 쿠데타에 의해 총리직에서 쫓겨났다가, 알부르한과 맺은 배신적 협상으로 11월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함독의 이번 사임으로 그 협상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적나라한 탄압으로 지배를 유지하는 현실을 은폐할, 민주주의를 가장한 위장막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함독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무런 대중적 지지를 누리지 못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엔은 모두 함독을 지지했다. 그가 군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워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그의 본질을 간파했다.



이제 “국제 사회”나 군부 타협적 인사들과 의존을 끊고, 대중 시위와 파업으로 저항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쿠데타가 일어난 이래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를 발휘하며 끈질기게 거리 시위를 벌여 왔다. 매 행진이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쿠데타 이래 보안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57명에 이른다.

12월 30일에는 대규모 시위대가 수도 하르툼의 대통령궁으로 행진하자 군경이 이들을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쏘았다. 그러면서 최소 네 명이 사망했다.

수단 활동가 제이납은 이렇게 전한다. “경찰은 무자비합니다. 일부러 최루탄을 직사해서 사람들을 다치거나 죽게 해요, 그런데도 계속 시위가 벌어지다니 참으로 영웅적인 일이지요.”

지난 며칠 사이, 기층 저항위원회의 지도적 구성원들이 체포되거나 실종

됐다는 소식이 늘어났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항위원회들은 저항의 엔진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거리를 통제하려는 당국의 시도에 맞서 왔다.

수단 활동가 사다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저항위원회들

은 혁명의 심장파도 같아요. 군부는 혁명을 끝장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항위원회 활동가들을 표적 탄압하는 것이죠.”

12월 25일 대규모 거리 시위 때도 이를 분쇄하려고 군대가 투입됐다.

그럼에도 그날 시위대는 대통령궁 인근까지 전진할 수 있었다.

저항은 이제 “국제 사회”나, 군부와 의 타협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모든 의존을 끊어야 한다. 쿠데타에 맞서는 세력들은 더 공세적이어야 하고 알부르한과 군부에 맞선 대안적 권력의 구실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 시위와 연결된 광범한 파업을 통해 저항위원회는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FFC) 등의 항쟁 내 자유주의 세력은 운동을 승리로 이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의 핵심 권력자들이 인정한 방식과 엘리트들의 협상이라는 틀 안에서 저항을 제한하려 한다.

총리를 사퇴시킨 이번 승리는 더 많은 저항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6호 / 번역 이원웅

투잡 될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임준형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였는데, 이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며 규모를 늘린다. 여기에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신설된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군 간부 출신자에서 일반 병사 출신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휘와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전역한 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해, 예비군의 실제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려 한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상비 병력이 줄어들어 예비군의 중요도가 커졌다고 이 제도 시행 이유를 밝혔다.

예비군 강화는 군대를 더 효율화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계획의 일부다.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 상비 병력 규모를 줄



인구 감소와 군비 경쟁에 대응해 한국의 지배자들은 예비군 훈련과 규율을 강화하고 싶어한다

이고 간부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예비군의 실질적 전투 준비를 위해 장비 보강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예비군 관리·동원을 총괄할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서 병력 구조 개편 계획을 이어받았다. 2018년에는 육군 산하에 동원전력사령부를 실제로 창설했다.

전투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에 비추 보면, 이런 변화는 예비군 훈련이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예비군 훈련에 지각하면 입소를 금지하고, 훈련 성과에 따라 조기 퇴소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훈련의 규율과 강도를 높이려 했다. 또,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다 반발에 부딪혀 유예하기도 했다.

정예화

한편, 정부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데는 좀 더 넓은 맥락도 있다.

육군은 동원전력사령부가 “통일 이후에도 미국·이스라엘과 유사한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이상의 배경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신흥강국의 부상”으로 “군사력 현대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병력 구조를 개편해야 할 배경으로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좀 더 분명하게 “중국어 신흥국들의 부상”을 언급한다.

이런 인식 속에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열째로 군비 지출이 많은 국가다. 지난해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정찰위성 도입 추진 등 군비 증강 노력은 그칠 줄 모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비 증가는 6.5퍼센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4.7퍼센트보다도 높다.

한국의 군비 증가는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자극하고 긴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시위 진압

국가는 다른 국가나 노동계급으로부터 자국 지배계급을 보호한다. 군대는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특수한 무장 조직이다. 예비군도 군대의 일부인 만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예비군은 박정희가 1968년에 창설했다.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한 사건 직후였다.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 것이

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은 예비군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1998년 집권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1980년 12월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입”이 예비군의 임무로 추가됐다. 5·18 광주항쟁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군을 시위 진압에 동원할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으로 격화된 ‘분신정국’ 시기에는 서울의 일부 예비군 동대에 “소요진압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 부대는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대외비 공문이 하달되기도 했다.(실제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한홍구, ‘예비군은 개진다, 고로 존재한다’, 〈오마이뉴스〉, 2002)

요컨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대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노동자·서민층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정세의 불안정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일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군비 증강에 쓰는 돈을 복지와 일자리 확대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독자편지

WS@wspaper.org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한 택시 기사와 나는 대화

새해 첫 외부 일정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신지에 사퇴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발표가 보도되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콧방귀를 끼며 혀를 차기에 “윤석열이 많이 맘에 안 드시나 봐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며 윤석열에게 비판을 퍼붓다가, 그렇다고 자신이 이재명을 덮어 놓고 지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다 문제라고 생각

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변에 “기후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은 없고 맨날 부동산 타령이나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하고 말해, 한참 같이 기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의 관점이 사뭇 좌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뒤졌는데(저는 평소 지난 호 신문을 몇 부 넣고 다닙니다) 마침 노동자연대 단체가 COP26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진이 1면인 <노

동자 연대> 신문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에게 그 신문을 주면서 <노동자 연대> 신문이 기후 운동과 한국 정치에 대한 옳은 기사들을 많이 신는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는 방법도 한참 알려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는 연신 고맙다며 꼭 읽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매우 사소한 경험이지만, 새해 첫 출근 때 있었던 새해 첫 신문 소개와 나눔이었습니다.

김정아 (노동조합 활동가)

동료들과 함께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했던 경험

지난 호에 실린 여성 차별 경험에 대해 한 동지의 독자편지를 읽고 제가 직장에서 겪은 성차별이 생각나서 기고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환자가 비키라며 제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딪힌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시 일을 하러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수간호사와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 일을 얘기하고 CCTV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이어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해당 환자가 혈압을 잴 때 가슴을 톹 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간호사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신체적 접촉에 항의하자 간호사 면살을 잡은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

구두 경고만 할 뿐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혼자 삭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갈 거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간호사는 같은 여성이고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해서 누구보다 우리 노동환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의료진에게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처음에는 매우 경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 나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이 보호받기 어렵고, 환자 유치가 병원 이윤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자 한 명에게서 월 200만 원가량, 일 년 열두 달 내내, 몇 년씩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 이윤에 큰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은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겪는 불쾌한 언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

고 반복적인 성차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머리를 모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공유했고, 신체적 접촉을 막기 위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의료 처치를 할 것인지, 어떤 멘트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인지도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손을 들고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해 즉각 손을 바꿔 주거나, 같이 모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 뒤에는 불쾌한 언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이 나와 함께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가 겪은 성차별은 저와 제 동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겪는 일입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싸웠듯이 여성 차별이 뿌리내린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동지들과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선희 (간호사)

노동자연대의 박근혜 사면 규탄 성명을 읽고

현대중공업 노동자 독자가 노동자연대의 박근혜 사면 결정 규탄 성명(‘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준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을 보고 분노에 찬 독자 편지를 보내 왔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박근혜의 정책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현실에서 문재인 박근혜 사면은 분노스런 일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조선소 협력사들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체납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치]을 유예해 주

도록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유용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은행 대출도 막혔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에서는 250개 업체가 4대 보험료 460억 원을 체납했다. 현대중공업의 체납액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에 또다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줬다.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데, 사장들만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고박고박 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업체들의 보험료 체불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한다. 하청업체가 체납된 보험료를 해결하지도 않고 폐업하거나, 보험료를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다.

한서구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

이 독자편지는 원래 1월 4일에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답변이 들어와 지면에 함께 실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소폭 반등했지만 상대적 · 부분적인 수준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 회복은 더뎠고,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석유 · 석탄 ·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제국주의 경쟁 강화와 기후 위기가 문제를 증폭시켰다.)”

위 문단을 제가 해석해 보면 이

렇습니다.

(1) 최근 석유 ·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공급 불안정입니다(시장의 무게회성).

(2) 제국주의 경쟁도 가격 상승을 증폭시켰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 금지).

(3)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가 가격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거나 설명을 더 듣고 싶네요.

이상엽 (부산 청년 노동자)

이상엽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여름 폭염으로 중국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국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탄광이 폐쇄되면서 석탄 공급에 차질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에 폭우가 내려 탄광 10퍼센트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여름 강력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강타하면서 많은 정유 시설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수요가 2021년에 회복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원자재 공급난도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영 <노동자 연대> 기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QR코드

wspaper.org/subs2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f

노동자 연대

ws

wspaper_org

tw

@wspaper

yt

노동자 연대TV

QR코드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보세요

NEW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 검색

QR코드

소책자 소개 보기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영화평 <돈 룩 업>

기후 파국을 암시하는 블랙 코미디

미국의 풀뿌리 기후정의 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영화 <돈 룩 업>을 “기후 위기에 대한 비유”라고 강력히 추천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구적 기후 비상사태에 있고 권력자들은 이기적이고 무능하다.”

애덤 매케이 감독은 기후 위기 영화를 만들려고 여러 해 동안 애썼지만 잘 안 풀렸다고 한다. 그러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좌파 언론인한테 기후 위기를 혜성 충돌에 빗대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한다. (애덤 매케이는 버니 샌더스의 후원자·지지자다.)

애덤 매케이는 자신의 전작들 <빅쇼트>(2015), <바이스>(2018)와 함께 <돈 룩 업>(2021)을 “톰슨 3부작” 또는 “세상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됐지? 3부작”이라고 부른다. <빅쇼트>는 미국의 경제(월스트리트의 흡혈귀들), <바이스>는 정치(워싱턴의 전쟁광들)를 아주 잘 폭로했다.

<돈 룩 업>은 천문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제니퍼 로렌스 분)과 교수(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하고 궤도를 분석하면서 시작한다.

혜성은 6개월 뒤 지구에 충돌할 것이고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킬 것이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0억 배에 달한다. 거의 모든 생물이 멸종될 거라는 뜻이다.

백악관에 호출된 이 과학자들이 상황을 설명하지만, 비서실장이자 대통령 의 아들(조나 힐 분)은 (코카인을 흡입한 듯) 코를 만지작대며 짜증을 내고, 맥락도 없이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 역시 심드렁하다. 백악관 권력자들에게는 6개월 뒤 혜성 충돌보다는 3주 남은 중간 선거가 가장 중대사안인 것이다.

결국, 백악관 권력자들은 임박한 “멸망 수준의 사건”을 “잠재적” 중대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지켜보자”고 결론 낸다. 거기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에다 똑똑히 새겼다”는 영혼 없는 거짓말까지 전부 낚설지 않다. 기시감이 들 정도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난 2년 동안 보여 준 팬데믹 대응이 모두 저렇게 거짓말과 무능함, 이윤과 잇속에 눈먼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현실이 영화나 코미디를 앞지른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이 진행돼 현실에서 정부가 영화보다 더 파렴치하고 무능하게 굴수록 애덤 매케이와 제작진은 대본을 점점 더 신랄하게 고치면서 영화를 찍어야 했다.

거짓과 무능

백악관에서 퇴짜 맞은 과학자들은 분분을 터뜨리며 미디어를 찾아가ندا. 그러나 <뉴욕 타임스>를 닮은 신문사와 가장 영향력 있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은 선정적인 클릭 미끼에만 열 올릴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행인지, 섹스 스캔들로 중간 선거에서 불리해진 백악관이 혜성 충돌을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이벤트로 몰아가려 한다. “나사(NASA)와 위대한 미군”이 핵폭탄으로 “공공의 적” 혜성을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절대적으로 구제불능이다.

“차세대 첨단기술”이라는 허풍을 떨며 역겨운 위선의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빅테크 기업은 혜성을 지구로 가져와 희토류를 비롯해 “거의 17경 원(1700조 원의 100배)쯤 되는 광물”을 뽐아내려고 한다.

영화만큼 현실의 빅테크 기업들도 탐욕스럽고 추악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첨단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을 거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파괴적으로 채굴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하루 4달러만 받고 12시간씩 맨손으로 파내는 코발트가 전 세계 공급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휘황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이처럼 거의 플랜테이션 수준의 착취와 환경 파괴에 기반해 있다.

2020년 한 해 확인된 숫자만 227명이 채굴과 벌목 등에 반대하다가 살해당했다. 그런데도 광물 채굴과 석유·가스 추출에 맞선 필사적인 저항들이 지구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다.

<돈 룩 업>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토론할 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엔딩 크레딧 전에 나오는 쿠키 영상까지 그럴 수 있다. 세계 부자 순위 1·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각각 화성에 건설하려는 식민지와 우주 공간에 계획하는 인공 도시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다.



해독제

다만, 아쉽게도 <돈 룩 업>은 사악한 지구 파괴자들, 즉 자본가와 정부에 맞서 싸우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의 중요성을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투자 철회”를 외치는 활력 없는 소규모 행동을 몇 초 동안 흘끗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재앙만 경험한 건 아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맞는 말이다. 팬데믹, 기후 위기, 극우의 부상은 끔찍했지만, 중요한 대중운동들이 성장해 놀라운 잠재력을 과시했다. 독과 해독제 둘 다 있는 것이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살쟁이파업(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들어가는 비공인 파업) 수천 건이 일어났다.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되고, 한 달 동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작업 중단이 최소 600여 건 있었다.

2021년에도 비공인 파업이 트렌드라고 할 만큼 유행했다. 미국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코로나 관련 보호조치와 개인 부담 비용 등의 문제로 싸웠고, 종종 파업 파괴 대체근로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피케팅까지 벌였다.

기후 위기의 위험도 고통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뒤 찾아올 혜성 충돌보다는 훨씬 느린 종말일 것이다. 지구를 구하려면 반드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을 쥐고 이윤만 쫓아 멸망으로 치닫는 자본가들, 정부들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크고 강력한 대중운동과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에게 있다.

김현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workerssolidarity.org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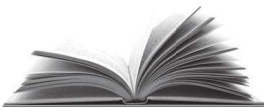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역자 서평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폴 더마토, 책갈피, 624쪽, 24,000원)

생생한 최근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다가가기

이원웅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번역자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부터 오늘날 그 사상과 운동이 갖는 의미를 다룬 훌륭한 입문서 《미국 사회주의자가 들려주는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가 나왔다.

저자인 폴 더마토는 미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같은 제목으로 2002년부터 격주로 연재했던 칼럼들을 엮어서 2006년에 출간했다가 2014년에 대폭 개정·증보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의미”라는 제목에 걸맞게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면서도, 되도록 최근의 사례와 쟁점 등을 들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가 “유의미”한지 보여 준다. 저자가 2014년 개정판을 낸 것도 “몇 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해” “현대의 사례들을 갱신”하기 위해서였다. 초판을 낸 후 벌어진 세계경제 위기를 감안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더 자세히 다루고, 생태 위기 등 더 중요해진 쟁점에 관한 논의도 보강했다.

입문서치고는 다소 두껍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현대의 생생한 사례와 논의들을 다루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본 번역서는 원서가 출간되고 7년이 지난 다음 나온 것이지만 그 생생함은 전혀 바래지 않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위기에 처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는 마치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저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후대 혁명가들이 어떤 맥락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는지 설명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최근의 연구나 그들이 논박하려 했던 주장의 현대적 형태 등도 다룬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인간 본성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오늘날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마르크스가 거부했던 기계적 유물론의 최신 형태인 진화심리학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계급과 국가의 출현을 다룬 대목에서는 엥겔스가 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최근의 인류학 연구들을 소개한다. 마르크스 시대 이후의 크고 작은 여러 투쟁 경험들에서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는 첫 세 장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기원과 방법론, 역사유물론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오늘날, 특히 장기 불황의 시작점이 된



사진 출처: Steve Farnham(블리자)

지난달 토네이도로 파괴된 미국 켄터키주의 한 도시. 기후 위기는 이런 재난을 계속 키울 것이다. 자본주의는 갈수록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재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8~2009년 세계적 금융 위기와 뒤이은 부채 위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사회 변화

이후 저자는 다시 사회 변화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서 마르크스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주목한 노동계급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살펴본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오늘날에도 선거와 입법을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는 왜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없는지 다룬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인 만큼 저자는 이 문제를 미국 정치와 역사라는 맥락에서 많이 다룬다. 그러면서 집필 당시 집권 중이던 오바마 정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 한계를 풍부하게 폭로한다. 이런 분석과 폭로들은 현 바이든 정부의 한계를 미국 민주당의 역사와 본질적 성격 속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장과 9장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

로 이끈 볼셰비키의 건설과 그들의 경험은 오늘날 좌파들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승리와 패배를 다루면서, 그 패배가 낳은 스탈린주의 지배 체제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이후의 장들은 제국주의와 여성·인종·성소수자 차별, 기후 위기 등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다룰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후대의 혁명가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이 다루는 쟁점들은 대부분 오늘날 더 첨예해졌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고, 팬데믹이 촉발한 경제 위기는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큰 국가 개입을 낳았다. 팬데믹 초기의 충격이 가시기 시작한 후에도 시장은 자신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급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팬데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과 재난도 더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도 갈수록 날카워지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으로 점철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모순과 위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사실, 이 방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보이는 탁월함은 자본주의 옹호자들도 종종 인정하는 바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금, 마르크스의 혁명적 정치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분석과 설명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연설했듯이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혁명가”였다.

그리고 이 책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명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다루고 있다.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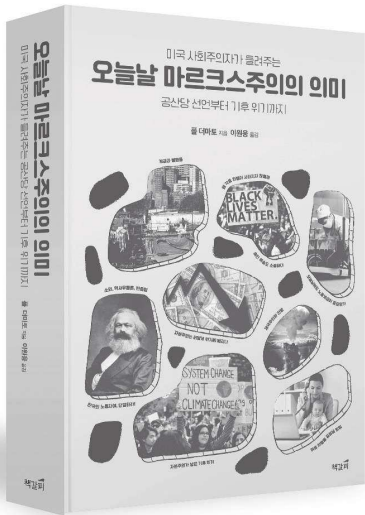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주의는 흔히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국유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국가를 강화하기는커녕 국가 자체를 폐지해 버리기를 바랐으며,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으로 기존 국가 기구를 분쇄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면서 국가의 사멸이 가능해진다고 봤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누군가가 노동계급을 대신해 선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합법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늘날 지배적 사회주의 조류는 이를 거부하는 개혁주의에 해당한다.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제러미 코빈 지도부하의 영국 노동당,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속한 미국의 민주사회당(DSA) 등 지난 몇 년 동안 체제의 위기 속에서 부상했던 여러 급진 좌파들도 이런 개혁주의에 해당한다. 비록 개혁주의 내에서는 급진적인 축에 속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혔다.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체제의 논리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에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이다. 또, 노동계급 투쟁 자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의회 체제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을 우선하는 전략으로는 지배자들에 맞설 힘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포데모스가 연립정부 파트너로 정부에 들어가고 시리자가 집권했지만 대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하고 위기에 빠진 것은 바로 이런 약점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금, 마르크스의 혁명적 정치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이유를 말한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1주일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타 택배사 노동자들은 대체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돼야 하나,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곳곳에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

택배노조의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응답자 900여 명) 결과를 보면,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분류 작업 인원과 작업 시간이 부족했고, 심지어 분류 인원이 1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택배 요금 인상분을 분류 작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지

않고 60퍼센트 이상을 자기 몫으로 챙겨갔다. 또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무조건을 강요하려 한다. 정부는 이를 승인하곤 수수방관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게서 택배 현장의 실태, 사측의 위선, 파업 분위기 등에 대해 들었다.

이경숙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여수지회 사무부장

이번 투쟁의 핵심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택배 요금 인상분을 과로 예방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온전히 사용할 것, 당일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폐기할 것입니다.

지난해 요금 인상분 170원 중, 대리점에는 분류 인력비와 고용·산재 보험료로 50.1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나머지 비용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했는데 말이죠.

노조가 이를 폭로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니, 회사는 '인상분의 50퍼센트가 노동자들에게 분류비든 보험료든 수수료(임금)든 명목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 얘기대로 해도 나머지 50퍼센트는 회사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회사는 택배 요금 인상분 용처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설치한 휠소터(자동 분류 장치)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물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몫이에요. 회사가 요금 인상 전에도 계속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한 거고요.

더구나 각 터미널에 휠소터를 설치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수수료(임금)를 [건 당] 10원, 20원씩 깎았어요. 물론 회사가 택배기사에게 직접적으로 삭

감을 통보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회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관계잖아요. 3~4년 전에 여수에도 휠소터가 설치됐어요. 회사에서 휠소터를 설치하면서 매달 대리점 소장들에게 운영비로 지급하던 100만 원을 안 준다고 했대요. 그러자 소장들은 기사들의 수수료를 깎아 버렸어요. 소장들은 1원도 손해 보기 싫다는 거죠. 결국 우리 수수료 깎아서 휠소터를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부속합의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해] 처음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때 부속합의서는 안 들어갔어요. 부속합의서엔 과로사를 유발하던 예전 계약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이를 승인해 줬으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되죠.

간선차[허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가 있는 서브터미널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다 들어와야 물건을 다 싣고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간선차가 들어와 하차싣고 온 물건을 내리는 것 작업이 끝나면, 늦을 경우 오후 2~3시입니다. 그럼 그때 나가서 언제 일을 끝내죠?

요즘엔 오후 5시부터 퇴근들을 해서, 그 시간대부터 아파트나 주택가에 택배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여수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퇴근 시간에 걸리면 도로에서 1시간가량을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터미널 도착 상품의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면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루이를 늘어나게 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과로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신선식품 외엔 다음 날 배송해도 고객센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는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고 개선해 온 노동조건을 수포로 돌리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파업 대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에 노조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처음으로 분류 인력이 충원되는 것을 보면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한, 지역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우리 투쟁에 연대도 많이 오세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 전 투쟁을 통해 전원 원직복직을 쟁취했어요. 우리가 그 동지들이 우리 투쟁에 연대를 오고 계세요. 지역 농민회에선 저희 조합원 수대로 쌀 한 가마니씩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런 연대가 큰 힘이 됩니다.

최남선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남울산지회 노동안전2부장

[2020~2021년에] 21명의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보호받을 법 조항조차 없는 택배 현장에서 예견된 죽음이었습니

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의 명목으로 택배 요금을 인상했지만, CJ대한통운은 과로사를 일으키는 당일 배송과 중량을 초과하는 상품의 배송을 강요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오히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에 반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노예 계약인 부속합의서 폐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타 택배사 노동자들의 대체 배송 거부 선언은] 동종업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담장을 넘어 함께하는 모범이었습니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처럼, [이러한 연대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인터뷰·정리 신정환·김지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2022년 1월 13일(목)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토론자 (노동자연대) 기차 (최근 한국 현대사 - 광복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문재인 정부, 촛불 운동을 재조망하다) 공저자

참가신청 bit.ly/meeting0113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촛불 투쟁으로 퇴진 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원했던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무효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집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문의 02-2271-2350, 010-4809-2026(분자 가용)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유익한 좌파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노동자연대TV를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주말 pick)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바로가기

노동자연대 TV의 새 코너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백신패스 논란

...